

정부,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이재명 정부 발표 부동산 정책

2025년 6·7 대출규제	
·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으로 제한	대출규제
· 수도권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LTV 0%)	
9·7 공급대책	
·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 이상 공급	주택공급
10·15 부동산대책	
· 서울 전역·경기 12지역 대상 삼중 규제지역 지정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출규제
·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등 수도권 규제지역 금융규제 강화 (15억 원 초과 주택 대출한도 4억 원·25억 원 초과 주택 대출한도 2억 원)	지역규제
2026년 1·2·9 공급대책	
· 9·7 공급대책 후속 · 공공부지·노후청사 활용해 수도권 6만 가구 공급	주택공급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부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왔으나, 이재명 정부에서 유예 기간 끝나는 2026년 5월 9일 이후 유예 종료 발표	

자료: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조정대상지역은 잔금 최대 6개월 미세조정 검토

이 대통령 “또 연장” 부당한 믿음 갖게 한 책임”

정부가 오는 5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 재경부가 마련한 방안을 보면 중과 유예는 5월 9일까지 잔금까지 모두 치러 양도한 거래만 적용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 한해서는 일부 말미를 주기로 했다. 2017년 9월 지정된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4개구에서는 5월 9일까지 일단 계약만 하면 최대 3개월, 즉 8월 9일까지 잔금·등기를 해도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부동산 거래 관행 및 시장의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또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해야 한다”며 일부 예외를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조정대상지역 거래는 3~6개월까지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비정상과 불공정 행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과 유예 조치는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 거래 관행 및 시장의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또 국민 불편을 최소화

천·광명·성남·수원 등은 말미를 6개월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지역에서 5월 9일까지 계약을 마쳤다면 11월 9일까지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오늘 토의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를 이용해 국민이 중과를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구 부총리가 밝언 도중 ‘아마’라는 표현을 두 번 썼다”며 “‘아마’는 절대 안 된다. 0.1%도 안 된다. 완벽하게 이 정책의 신뢰와 안정성이 꼭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정부는 ‘또 연장하겠다’ 하는 부당한 믿음을 갖게 한 데 책임이 있다”며 “5월 9일까지 중과세 면제, 이 기준은 지키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들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구 부총리는 토지거래허가제는 허가 후 4개월 내 잔금·실거주 의무가 있는데, 이 날 재경부가 제안한 3·6개월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기간을 미세 조정하겠다고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다주택자 관련 규정을 법률로 옮겨야 한다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적에 “이번에는 시간이 없으니 시행령으로 하고 (이후) 아예 법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광주국세청 “현장 중심 적극행정 실천”

상반기 세무관서장 현안 공유 개선사례 소개 등 쌍방향 소통



광주지방국세청은 3일 정부광주합동청사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과장과 일선 세무서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갖고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 지시사항 전달 형식으로 진행됐던 방식을 벗어나 모든 관서장들이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올해 중점 추진사항 등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쌍방향 소통으로 진행됐다.

적극행정 사례로는 간이과세 배제지 역을 전면 제거해 영세 사업자에게는 이과세 혜택을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와 체무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개인회생 청탁자의 법원 면책 결정문을 확보해 체납액(납부지연가산세)을 소멸시킨 사례, 지역민원실을 행정복지센터나 군청 내로 이전해 국세·지방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 등 3건이 소개됐다.

김학선 청장은 “국세청 개정 60주년을 맞아 국세행정 대도약이라는 공동의

비전과 목표를 위해 현장 중심의 세정을 펼치겠다”며 “자금난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납기연장·담보면제 등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추진

‘워시 쇼크’ 딛고 코스피 7% 급등…하루 만에 5200선 복귀

5년 10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

‘16만전자’·‘90만닉스’ 재입성

코스닥 4%대 ↑…금·현물 회복



코스피가 3일 7% 가까이 급등해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전장보다 338.41p (6.84%) 오른 5288.08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5.97p (4.19%) 오른 1144.33에 장을 마쳤다.

상승률은 2020년 3월 24일 8.60% 이후 5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다.

전날 5% 넘게 급락했던 코스피 지수는

장 시작과 동시에 5100선을 돌파 후 오름

폭을 키워 지난달 30일에 세운 종가 기준

최고치인 5224.36을 경신했다.

오전 9시 26분에는 코스피 200선을 지

수가 5% 넘게 치솟으면서 프로그램 매수

호가 일시 흐름정지(사이드카)가 발생되

기도 했다.

기관은 코스피 200선을 시장에서도

3772억 원을 우위였다.

간밤 뉴욕증시에서 3대 주가지수도 동

반 상승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034억 원, 2조 1695억 원을 순매수했다.

전날 올해 최대 액수인 4조 원대를 순매수한 개인은 2조 9385억 원을 매도 우위를 보였다.

기관은 코스피 200선을 시장에서도

3772억 원을 우위였다.

간밤 뉴욕증시에서 3대 주가지수도 동

반 상승했다.

국내 증시는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을 마쳤다.

업계용 기자 djawodyd0316@

국내 증시는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을 마쳤다.

업계용 기자 djawodyd0316@

전기료 지역 차등 속도…“1㎾당 10~20원 차이”

송전비·국가균형발전 지수, 에너지집중도 고려해 설계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달리 적용했을 때 경영평리를 받는 88개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률을 2030년까지 6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률은 평균 14%로, 그나마 수력 설비를 다수 보유한 한국수자원공사를 제외하면 평균 2%로 그친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1㎾당 180~185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발전소와 거리에 따라 10% 안팎 차이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원거리 송전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생산지에 산업을 유치해도 송전 비용을 빼 낸은 전기요금으로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송전 비용과 국가균형발전 지수, 에너지집중도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하는 제도를 설계 중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전남 신안군에서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한다고 가정하고 전기요금 차이를 얼마나 낼 수 있느냐고 김 장관에게 물었고 김 장관은 “대략 1㎾당 10~20원”이라고 답했다.

기후부는 지역별 요금제 도입 방안을 연내 제시하기로 한 상태다. 기후부는 이날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연합뉴스

경영평리를 받는 88개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률을 2030년까지 6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률은 평균 14%로, 그나마 수력 설비를 다수 보유한 한국수자원공사를 제외하면 평균 2%로 그친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1㎾당 180~185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발전소와 거리에 따라 10% 안팎 차이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시 K-RE100(재생에너지 100%) 가입 및 이행 실적을 평가하기로 했다. 배점은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 2.5점, 나머지는 2점이다.

공공기관이 주차장 등 유류 부지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거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해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경우 이를 실적으로 평가한다.

기후부는 1분기 내 1000억 원 규모 ‘공공기관 K-RE100 펀드’를 조성, 공공기관들이 유류 부지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다음 주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연다. 기후부는 이날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연합뉴스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제조AI 중소기업, 연구인력 채용 최대 2명까지 확대

중소벤처기업부가 연구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2026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인력의 채용, 파견, 양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연구 인력난을 완화하고 기술 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전문·학·석·박사 연구인력(신진·고경력) 채용할 때 해당 연구인력 인건비의 최대 50%를 3년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규 선정 인력의 60%를 비수도권에 할당하고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연구인력을 대할 예정이다.

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은 4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순재 지역기업정책관은 “앞으로 중소기업이 필요한 연구인력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에 공공 연구 기관의 전문 연구인력 파견도 지원한다. 파견된 연구인력은 기술 문제 해결 등 업무를 수행하고, 중기부는 파견 인력 연봉의 최대 50%를 3년간 보조한다.

올해 다양한 중소기업의 기술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기존 11개 파견 연구 기관을 차례로 확대해 파견 지원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AI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조 AI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산학 협력 전문 교육을 시행하고 양성된 인력을 해당 중소기업 채용에 연계한다는 방안도 마련됐다.

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은 4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순재 지역기업정책관은 “앞으로 중소기업이 필요한 연구인력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